

충남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영미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에 기초해 부녀복지사업으로 발달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전환되고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1년 여성정책전담부처로서 '여성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출범되었고, 2005년에는 여성부를 모체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여성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진전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여성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치 및 개편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법의 구체적 적용과 시행을 담당해야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여성복지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하위 행정 단위가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근거하여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접경해 봄으로써 충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복지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향후 충남 여성복지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충남 여성복지의 현황¹⁾

1. 요보호 여성의 복지지원 사업 현황

1)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 부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의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

구분	전체 모자가정		재가보호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2004	2,566	7,050	1,181	3,112
2005	3,207	8,907	1,473	3,924
2006	3,480	9,477	1,630	4,226

충남에서는 2006년에 89명의 모자가구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평생직장 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녀의 능력 향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나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고자 모자복지기금을 확보하여 대학입학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또 이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모자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학대로 피난중인 모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들을 위해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을 1개소 운영하고 있다.

1) 출처 : 충청남도, 「2007 충남여성백서」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도정백서」

01

천안시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례를 발굴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자 가정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모자가정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결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청구소송 및 미혼부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무료법률구조로 한부모 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데, 그 적용대상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인 남편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다. 성폭력 피해여성은 1994년 1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적용대상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며 성폭력이란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협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여성폭력 긴급보호 및 상담을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인 「충남여성1366」, 가정폭력상담소 22개소, 성폭력상담소 1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등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2006년 상담 실적이 33,979건으로 매년 상담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여성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동안 사적문제로 여겨왔던 여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 및 여성권의 신장의 문제로 인식하여 상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2〉 충남 여성폭력 상담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전문기관 알선	생계 보호	직업 알선	치료 의뢰	수사법적 지원	기타
2003	21,756	20,137	397	95	275	578	104	173
2004	25,319	18,905	3,133	291	246	609	1,649	486
2005	34,342	25,305	4,570	250	437	642	1,934	1,204
2006	33,979	24,967	4,127	240	445	738	2,421	1,041

〈표 3〉 상담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4	2005	2006
여성긴급전화 1366	1	1	1
가정폭력 상담소	12	17	21
성폭력 상담소	6	7	1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6	6
성매매피해 상담소	1	1	1
성매매일반지원 시설	1	1	1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은 6개소가 운영되어 2006년에는 총 368명의 입소자에 대하여 숙식과 의료지원 및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지원 1개소가 운영되어 입소생 22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취업·창업 가능한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다.

〈표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소수	-	1	1	2	2	2	3	6	6
보호인원(명)	-	9	36	72	147	193	212	358	368

〈표 5〉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입소인원(명)	80	47	47	24	21	21	19	13	22

(3)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여성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치료구조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치료사업 9개소에 104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 교정을 위하여 보호시설 및 상담소 6개소에서 229명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프로그램 운영과 작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는 보호시설 입소자 22명에 대해 검정고시, 컴퓨터, 미용 등의 자활교육, 전문심리상담 103회, 인성변화프로그램을 68회 운영하였다.

(4) 기타 여성폭력 관련 사업

여성폭력 피해 보호지원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능력 향상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상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형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17개 기관 단체의 20명이 참여하여 운영해 오던 '충남지역협의체'를 성매매방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20개 기관 22명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기관·단체별 역할분담과 피해자 구제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성폭력·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범도민적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여성복지시설의 책임자 42명은 기관·단체 간 연계형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3년부터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해 시설관계자 회의를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할머니 4명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과 함께 생활안정지원금을 매월 74만원씩 지급하였다. 또한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의 파악과 설·추석명절 및 광복절에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꾸준히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2명에게 간병비 166만원을 지원하였다.

3)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문제 등이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가정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한국문화 이해부족, 한국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녀들이 또래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아동과 부모들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충청남도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 6>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 현황

구분	출신 국가별								
	계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우즈베키 스탄	캄보디아	기타
2005	1,514	600	347	255	179	51	20	11	43
2006	2,190	823	574	348	275	77	32	25	64

<표 7>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및 취학별 현황

구분	가구별 자녀수						취학별 자녀수					
	계	없음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05	1,514	531	457	382	115	29	1,613	1,080	413	33	30	57
2006	2,190	690	734	555	167	44	2,524	1,548	759	76	51	90

충청남도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복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으로는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성보호, 충남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문화보급사업”으로는 한글교실, 생활예절교육, 요리교실, 우리문화 가족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및 한국친정 만들기 결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내에 2007년 10월 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3개소(아산시, 공주시, 금산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2006년도 말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은 101,815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38,480명으로 전체 충남장애인 등록인구의 37.4%이다. <표8>을 보면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8> 여성장애인 증가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장애인 등록	60,273	67,701	75,313	83,589	92,634	101,815
여성장애인	19,032	21,371	25,487	29,333	33,746	38,480
여성장애인 증가율	22.53%	16.31%	15.58%	15.09%	15.04%	14.02%

충남에서는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2004년 3월 구성되어 출범하여 소외된 여성장애인 위기 개입과 상담 및 지원활동,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활동,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리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6년 ‘제4회 여성장애인 패션쇼’를 개최하여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장애인 패션쇼는 충남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여성장애인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모델이 되어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어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되어 오던 충남지역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지원, 산후조리, 자녀양육 및 중증 독거장애인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 장애인복지관 및 시군에 874백만 원을 지원하여 경증 여성장애인 또는 가사 도우미가 2~3인이 1조가 되어 충청남도 내에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5)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

충청남도 내 노인인구는 2006년 말 271,346명으로 전체인구의 13.7%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여성노인은 162,036명으로 전체 노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각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보급하였다. 2006년 전체 검진 인원은 884명이고 이중 여성노인이 627명으로 70.9%를 차지하였다.

기타 노인생활시설은 2006년 현재 14개소이며, 충남지역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2개소로 확충하여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노인들의 친교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충남 도내 경로당 시설은 5,254개소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에서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당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취미활동을 통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노인 솜씨 및 장기자랑 대회와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일반 여성지원 사업현황

1) 영유아 보육 사업현황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여성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취학 전 아동은 2006년에 117,958명으로 도 총인구인 2,000,844명의 5.9%로 앞으로 보육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40.3%인 47,560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01

〈표 9〉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시설	1,153	1,113	1,074	980	885	823	771
아동수	47,460	44,674	40,498	38,635	35,413	31,585	29,537
시설증감율(%)	3.6	3.6	9.6	10.7	7.5	6.7	10.3

충청남도 내 보육시설은 2006년 1,153개소로 47,460명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구당 4인 기준 월소득 247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20,212명에게 32,748 백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2007년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0세~4세까지의 아동에게 162천원~36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5세 아동 6,842명, 장애아동 540명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의 보편화를 실현하였고,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 2,701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었다.

2006년 충청남도 내 국공립 및 법인시설과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등 공공 보육시설의 종사자 1,912명에게 도에서 인건비 27,64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민간 보육시설 747개 시설에는 도에서 교재·교구비 668백만원과 농어촌지역의 370개 시설에는 714백만원의 차량운영비가 지원되었다.

〈표 10〉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2006)

구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	1,153	35	131	77	503	14	392	1
아동수	47,560	1,997	9,977	4,501	24,945	784	5,338	18

특수시책으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 60개 시설에서 156명의 장애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일반아동은 장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에는 담당보육교사 특별수당 월5만원, 장애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에는 월 30만원의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아전담시설 46개소, 장애아전담 7개소, 방과 후 전담 6개소, 시간 연장 80개소, 휴일보육 7개소, 방과 후 통합보육 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는 충남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보육의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까지 230개 시설이 자발적으로 신청, 참여 70개 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아동중심의 편안한 보육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는 물론 시설정보, 아동정보, 종사자 정보 등 보육통합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보육행정전산망을 2006년 9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도내 전 보육 시설과 행정기관을 연결하여 보육행정업무를 효율성 증가 및 보조금 지급의 신속, 간결,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0~2세의 영아에게 1인당 69~249천원씩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사업을 유아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현황

(1)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가. 여성단체 활동지원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여성단체는 13개 여성단체가 168개 지부를 형성 268,5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 미가입 단체에 8,868명이 활동하고 있어 모두 277,429명의 여성들이 각 여성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충남여성포럼 운영

2001년 5월에 충남여성포럼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교육문화, 사회복

01

지 보육, 농촌 환경 등 4개 분과 135명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2003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발족 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및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17개 도·시·군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자원활동센터의 여성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부자가정, 소외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5,259회 37,364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7개 분야에서 학습지도, 상담, 밀반찬 지원, 이·미용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증대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지역실정이 감안된 맞춤형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중간지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1,426명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1년간 활동을 결산하고 우수봉사자를 표창하며, 음악회를 열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표 11〉 여성자원활동센터 등록인원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5,059	2,047	100	172	376	191	134	104	483	60	95	119	133	161	200	363	321

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민간여성단

체를 사업주체로 하되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관련 후생복지·문화 활동의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신규설립 시 설립비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보조하고, 연간 운영비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7년 현재 50개소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3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마. 기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교양, 의식, 취미, 기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1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여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여성의 건강관리, 생활법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16개 시·군에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행정의 풀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 내 여성 통·이장에게 일선 행정참여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전훈련을 실시하여 여성후보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하여 선거전략 및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건강가정 지원체계구축

핵가족화 및 저출산과 이혼 등으로 가족의 인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충남에서도 2005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천안)를 운영하여 부부상담, 이혼 전 상담, 예비부부 상담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6년에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에는 장애아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아 양육자들이 가족의 애경사 등의 참석시에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01

계획이다. 2007년에는 당진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3) 지역여성 문화 활동 지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면서 도가 운영해온 여성회관의 기능을 개발원에 이관시키고, 기초단위 지자체별로 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가정복지회관 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당진군의 경우, 가정복지회관을 '여성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여성회관이 있다.

3) 양성평등의 촉진

(1) 성인지 정책형성을 위한 제도 강화

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충남에서는 정부의 여성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 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연도별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맞춰 충남이 추진할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수립 세부과제별로 관련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고,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체과제를 '특수과제'로 하여 9대 핵심과제 46개 시행과제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였다.

나.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1999년 7월 개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여성정책 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등 충남여성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원장 밑에 정책개발실, 교육실, 행정실 등 3개 부서가 있고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사업으로는 자체기본 과제 '충남 국제결혼가족의 실태 및 정착 지원방안 연구' 등 15건, 현안과제로는 '충남 한부모가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등 9건 등, 총 24건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지방화 시대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또한 교육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등 자체 프로그램 교육, '농촌 리더반 교육' 등 도의회 위탁교육 등으로 총 17과정 72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 돌보미 사업' 등 현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남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외부수탁교육을 통해 교육역량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였고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충남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 도정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적 관점의 정책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 말까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위축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 말 총 57개 위원회 760명의 위촉직 위원 중 289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위원 평균 위촉율이 38%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여성위원을 발굴하여 위촉권고 및 신규 여성위원에 대한 연찬회 실시와 각종 도정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12〉 연도별 여성참여 목표율(위촉직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목표율	32%	34%	36%	38%	40%

〈표 13〉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구분	위원회 수	여성위원 참여현황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	당연	여성	%	위촉	여성	%
2003.12	57	1,036	256	24.7	267	3	1.1	769	253	32.9
2004.12	57	1,028	268	26.1	267	5	1.9	761	263	34.6
2005.12	57	1,026	279	27.2	265	5	1.9	761	274	36.0
2006.12	57	1,105	296	26.8	345	7	2.0	760	289	38.0

라.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

2004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기획공모사업 8개 분야에 총 15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표 14〉 연도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계			기획사업			일반사업		
	분야	건수	사업비	분야	건수	사업비	분야	건수	사업비
2004년	9	32	120,000	6	25	99,000	3	7	21,000
2005년	11	41	150,000	8	35	129,000	3	6	20,500
2006년	12	40	150,000	8	35	135,000	4	5	15,000

마.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운영

공무원의 양성평등 마인드 확산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에 선택전문 교육과정과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소양과목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장교육과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표 15〉 연도별 공무원양성평등교육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	74명	81명	58명	42명

(2)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제도 정착

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도내 여성공무원 현황은 2006년 기준으로 4,181명(26.4%)으로 5급 이상(일반·별정·계약) 30명(2.9%), 6급 이하(일반·별정·계약) 3,460명(31.3%), 기능직 586명(25.3%), 특정직(소

방·교원) 105명(7.3%)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1년 20.4%에서 2006년 26.4%로 6% 증가하였고, 2006년 지방공채 여성합격자 비율은 9급 57%, 7급 27.8%를 차지하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저변 및 임용 확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02~2006)년도 여성관리자(일반직 5급 이상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 지도, 별정, 계약직) 임용 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결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9%(2006년 12말 기준)로 2002년에 비해 16명, 1.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목표율(9.3%)에는 미달된 상태이다.

〈표 16〉 제1차년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목표	전체	975	985	998	1,040	1,096
	여성	33	41	44	55	101
	비율(%)	3.4	4.2	4.5	5.3	9.3
실적	전체	856	966	979	985	1,029
	여성	14	21	25	25	30
	비율(%)	1.6	2.2	2.6	2.5	2.9

나.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추진

충청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항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 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중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과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적용되며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추진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9급	7급	연구·지도직
계	30	21	8	1
2003	1(여성1)	-	-	1(여성1)
2004	11(남성3, 여성8)	6(남성3, 여성3)	5(여성5)	-
2005	8(남성2, 여성6)	5(남성2, 여성3)	3(여성3)	-
2006	10(남성10)	10(남성10)	-	-

III. 충남여성복지의 과제

1.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필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므로 이 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은 지역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자체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보해 줄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2006년 12월 현재 모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충남은 2006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경우 일부만 제정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2006년 10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없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자치단체가 제정하였다는 것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는 자치단체가 여성발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무를 갖는지를 자치단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명문화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조례에서 여성정책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며 지방의 여성정책이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발전조례의 명문 규정에 따른 이행의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혜영, 2007). 따라서 충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현황

(단위 : 단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본청	1	1	1	1	1	1	1	1
자치단체 수	25	16	8	10	5	5	5	31
조례제정 자치단체	21	0	0	0	0	0	0	18
제정비율	84%	0	0	0	0	0	0	58.1%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1	1	1	1	1	1	1	1
자치단체 수	18	12	16	14	22	23	20	4
조례제정 자치단체	7	5	0	0	3	1	2	4
제정비율	38.9%	41.6%	0	0	13.6%	4.3%	10%	100%

* 2006년 10월 현재

2006년 12월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함

자료 : 김혜영, 2007, 74쪽.

2.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 필요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재정운용', '총 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정부부처는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앞서 이미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처의 양성평등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 2007).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가 시, 군, 구 차원에서부터 성별 분리통계에 기초하여 수집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충청남도에서도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계획·집행되는 예산 뿐 아니라 성중립적인 정책이나 일반주류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여성정책기구와 여성공무원의 위상과 권한 제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대부분이 국수준의 여성정책기구를 갖고 있고, 기초단위는 과 혹은 담당(종전의 계) 수준의 위상이다. 행정기구의 위상은 관련업무의 우선순위나 효과적인 집행과 직결되어 있다. 광역의 경우 과 수준에서 여성정책업무 전담기구 설치가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업무를 전담할 과(課)수준의 기구 설치는 미약하다. 충남의 경우 국 수준으로 여성정책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함을 <표19>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19> 광역자치단체 국·과 수준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인원

(단위 : 명, %)

시·도명	국명	과명	국인원* (과담당)	시·도명	국명	과명	국인원* (과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152(35)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95(19)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60(44)	충청북도	-	여성정책관실	24(13)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213(18)	충청남도	-	여성정책관실	33(15)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	여성정책과	147(18)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10(14)	
광주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76(12)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65(17)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과	116(16)	경상북도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48(16)	
울산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66(15)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07(17)	
경 기 도	본청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64(15)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49(11)
	2청	여성국	여성복지과	32(11)				

* ()는 여성복지관련국 중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담당 인원임

자료 : 김혜영, 2007, 83쪽, 재수정.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공직에서 성평등의 기본적이고 가시적인 실현일 뿐 아니라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계획수립과 집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충남에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저변 및 임용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02~2006)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결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9%(2006년 12말 기준)로 2002년에 비해 16명, 1.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목표율(9.3%)에는 미달된 상태이다. 이는

5급 공채 임용이 거의 없이 내부승진에 의존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으로 인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의 한계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관리직 승진대상인 6급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부족,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도에서는 앞으로 임용목표율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충남 지역여성의 실태와 요구에 근거한 여성복지정책 수립과 집행 필요

이제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저예산과 비예산, 행사성 전시사업과 성인지적 관점에 반하는 여성복지 정책의 내용에서 지역여성의 특수성과 구체적 요구에 근거한 여성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여타의 지역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중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손자녀 양육 가정, 여성농업인, 여성노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대상도 훨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구별되는 지역여성연구소가 지역여성의 실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 지역여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지역의 현장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여성연구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5. 정책과 예산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참여 시스템 마련

여성은 여성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며, 새로운 여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속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전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여성발전위원회, 충남여성포럼,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복지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조직들을 활성화하여 성주류화정책의 수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복지 또는 여성정책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여성문제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지역여성들이 실질적인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여성 소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충남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본격화되어 중앙정부의 단독정책결정 유형은 점차 감소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유형이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남도 여성복지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확립하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여성복지정책과제를 책정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주,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여성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제26권 제2호, 1999.
- 김소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애령,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혜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집행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윤정,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영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여성정책포럼」, 제8호, 2005.
- 충청남도, 「2007년 충남여성백서」, 2007.
- _____, 「2006년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한승준·주재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 200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 2007, <http://gb.kwdi.re.kr>